+

시

## 론



주 정 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창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개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벤처 담당 부 처가 있고,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를 두어 청년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신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주요국이 창업을 통해 그 기반을 다져왔기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 개(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엔 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창업 기업이다.

창업은 지역에서 더 큰 관심거리다. 지방 자치단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 을 지원하고, 창업보육단지 조성 등의 사업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열악한 경제기 반을 가진 지역은 창업만큼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방안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 에서 창업 성과는 기대 이하다. 창업 여건이 좋지 않아 실제 창업자가 많지 않고, 창업해

# 창업과 지역혁신, 핀란드 에스포시와 알토대학

도 성공하는 기업이 드물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벤 처투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술 창 개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지역에서 창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이 성 공하려면 아이디어와 인력의 지속적 제공, 충분한 교육과 자본의 투자, 제도적 지원과 후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자체, 대학, 기업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하 다. 실리콘 밸리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해 변화 를 일으킨 대부분 지역은 이러한 선순환 구 조가 잘 작동했다.

지역에서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 해 창업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대표시례가 있 다. 핀란드의 에스포시다. 에스포시는 인구 3 1만 명의 소도시로 노키아 본사가 있던 곳이 다. 핀란드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세계 휴 대전화 시장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가 어려 움을 겪으면서, 에스포시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그리고 '하나의 큰 노키아 대신 100개 의 작은 노키아'를 만드는 정책을 선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을 통해 창 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했다.

핀란드 정부와 에스포시는 2010년 오타니에 미(Otanemi) 지구에 알토대학을 설립했다.

알토대학은 헬싱키 공과대학(1849년 설립), 헬싱키 경제대학(1904년 설립), 헬싱키 미술 디자인 대학(1871년 설립)을 합병해 출발했 업 기업의 60%, 국내 유니콘 기업 24개 중 23 다. 기술, 경영,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창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다. 그리고 알 토대학을 거점으로 오타니에미를 창업 단지 로 조성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알토 대학은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과 일반인에게 창업을 지원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의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교 육하는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을 운영했다. 더불어 알토대학 학생 동아리 에서 출발해 유럽 최고의 창업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알토이에스(Aaltoes)' 등을 통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결과, 알 토 대학에서 지원하고 배출하는 스타트업 기 업이 한 해 평균 100개가 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에스포시와 알토 대학의 사 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원 기능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산해 핀란드의 혁신 창업 동력을 키웠다. 이제 핀란드는 창업 혁 신국가로 재탄생했다. 핀란드 기업의 70%가 창업 기업이고, 2015년부터는 해마다 인구수 대비 기술혁신형 스타트업 창업이 세계 1위 를 기록하고 있다. 창업으로 지역혁신을 꿈 꾸는 우리가 눈여겨볼 사례다.

# 社說

## 마을기업 위기에도 전남도는 숫자 늘리기 급급했나

전남도내 마을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휴업 또 는 폐업 상태라고 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를 창출하고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 기 위해 설립된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를 합해 332곳에 달하지만 이 중 123곳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방치되고 있으며 환수 조치도 미흡했다. 육성 사업이 시행된 지 1 0년이 넘었음에도 처리 내역은 단 2건에 머물렀 다. 내실있는 운영 관리와 질적 성장 보다는 숫 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전남도의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 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 만 부풀려 실적을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질 책이 나왔다.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여건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때 다.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 마을기업의 기반 마련과 판로 및 시제품 개발 등 다방면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주춧돌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하겠다.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경력단절 고령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 일조한다.마을기업의 본래 취지다. 형식적인 실태 조사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효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00여 곳이라는 적지 않는 수가 지정돼 있으나 100여 곳이 가동 중단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 설 및 자산취득비 등 2천만원의 보조금 지급과 판로 및 경영 컨설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지정 횟수에 따라 재 지정, 고도화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 최대 3천만원, 2천만원을 지원한다. 비록 규모는 작더 라도 효용성이 높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 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 지방의회 누리집까지 악용 딥페이크 강력 대응해야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진 을 도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협박성 메일 을 받았다. 광주지역 기초의원 다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메 일 등은 주민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누리집에 공개돼왔는데,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이 잇따르 고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 근 광주 한 기초의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메일이 소속 의회 누리집 상 민원 청취 등 '의정 활동용'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음란물 제작에 쓰인 증명사진 역시 여기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 된다.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에는 '당신의 법적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 고 있을거다. 문자보고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 '고 적혔고, 남성 의원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첨부됐다.

현재 피해를 봤다고 밝힌 이들만 10명에 달하 며,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함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 다. 경찰은 해당 이메일을 발송한 누리꾼을 추적

중이다.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각한 상황 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 딥페이크는 온 라인 성착취 등의 성범죄가 아니라 금품 갈취용 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인물 사진과 이메일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말았다. 공개 범위 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딥 페이크가 확산된다면 의정활동 축소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NS 상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여 러 모습을 게재하고 있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 다.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삼고, 엄중하게 수사를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의회도 지 금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경찰 신고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 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 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범죄가 이어지고 있 다. 광주까지 포함해 지역을 불문하고 무차별적 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 다. 딥페이크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일상 속으 로 급격하고 뻗치고 있다.

## < <!-- The state of the stat



백 준 희 에듀테인먼트 퍼니 대표

대한민국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무수히 쏟 아 내고 있다. 그 중 청년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소멸지역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청년들을 지방마다 데려 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정책, 귀농을 위한 장기적인 농업교육(스마트팜 영농기술, 농 업의 기술 등), 창업 및 투자를 위한 컨설팅, 주택 및 농업용지 구입시 신용보증 우대 등 정착해 살 수 있게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들 어내고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의하면 귀농·귀촌(전체 연령대)의 인구수가 2020년 47만7천명, 2021 년 49만5천명, 2022년 42만1천명, 2023년 40만 명으로 2022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추세에 이 르고 있다. 감소추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풀이된다. 코로나19팬데믹 시기 동안 일시적 으로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농촌생활에 관심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 청년 귀농·귀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심이 줄었다는 의견, 도시 지역의 고용상 황이 코로나19보다 더 나아져 도시에 다시 정 착하려는 심리가 급증했다는 의견 등 다양하 게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감소추세에 청년 귀 농·귀촌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청년이 유입 해야만 지역이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좋은 정 책을 실행하고 있나, 현실은 어떠할까?

2024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20대 청년 농 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유서 에는 "청년단체가 개인일에 단체일까지 무 수한 업무를 주어서 본업도 못하게 만들었 다. 내 일은 못하고 노예처럼 돈도 못 받으 면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정책이 실행되는 안에서도 악습이 숨어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착 을 위한 정책들은 이뤄지나 현실은 어렵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마을 안에 정착 해 살려고 해도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외지인이니 가격을 좀 더 내라"하는 지역 텃 세도 심하다. 또한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 사 기위험에서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땅이 비옥하다. 수확 잘 할 수 있다"라고 구입했 는데 과일이 자라지 않아 이유를 찾아봤더 니 땅속에 폐기물이 있었고, 모종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1년 농사를 심었는데 모종이 자 라지 않는 사례들은 귀농·귀촌 청년들을 힘

이러한 교묘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족 또는 지인

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통화가 끝나면 절대 현금을 입금하지

말고 해당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2에 신고 해야

두 번째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기

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어

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들게 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은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다. 농사를 위해 땅을 구입하고, 스마트팜 설비투자를 해 시스템을 갖춰야 한 다. 당연히 스마트팜을 하면 정부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다 하더라고 억단위 의 금액이 필요해 융자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생산된 상품 을 팔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하 지만, 지역 네트워크가 없다면 납품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판로 개척이 어렵다. 다양하 고 복잡한 지역 판로 연계망도 새로운 외지 인에게 힘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1대 국회에 서는 귀농·귀촌 방해금지 법안이 발의됐지 만폐기됐다.

우리 귀농·귀촌 청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최근 5년간의 귀농·귀촌 청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통계들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유입만 통계가 있지, 폐업 및 운영되는 현황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만큼 인구유입에만 신경쓰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후관리가 돼야 만 상처받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만들어지 지 않을 것이고, 수 많은 청년들이 귀농・귀촌 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

특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없

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 다른 피해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사소한 112 신고가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은행

에 직접 전화해 그러한 대환대출이 있는지

### 그래픽 뉴스

####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 4년만에 역성장…기업 투자도 감소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내 수기업의 매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 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처음으 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 회(한경협)가 13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금융업 법인 814개사의 경영 성과를 분석 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다만 이런 증가세는 수출기업(194개사)의 매출액이 13.6%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머 지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 기보다 1.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기 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6% 반등했으나,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5 .9% 증가에 그쳤다. 이런 착시효과가 빚어진 것도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내수기업 매출액 증감률** 추이 전체기업: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금융업법인814개사 내수기업:매출액수출비중이 50% 미만인기업 620개사 25.4 전년동기대비 18.4 내수기업 10.6 6.7% 3.9 -3.4 -1.9% -2.6 -4.2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상반기 **⑦연합뉴스** 자료:한국경제인협호

올해 상반기 수출기업 매출 증가세는 지난해 매출액 감소(-7.3%)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 도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기업 투자 역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8.3%)했다. 전체 기업 투자 증가 율은 2020년 16.9%에서 2022년 9.5%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5.7%로 반등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대폭 줄었다. /연합뉴스

### <び 독자투고

#### 나날이 발전해 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남 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금융기관의 높은 직책을 말 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로 신규 대 출을 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 인출책에게 직접 금전을 전달받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20 대부터 고령의 피해자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가 사고 예방의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운전중 불필요한 사소한 행

위들이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

운전중 흡연, 음식물 먹는 행위, 휴대전화

사용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불필요한 행동

들이 사고 유발을 한다. 더욱이 운전중 도로

변이나 게시판에 난립된 각종 광고 현수막을

종 물품을 할인한다고 하는 광고, 마음을 솔 깃하게 하는 문구 등 난립된 광고들을 순간 적으로 쳐다보며 운전하면 방어운전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위험천만이다.

또한 갑자기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 반하며 진행하는 차량들과 충격해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높아 운전중 광고 현수막 등 불필요한 게시물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것은

아울러 운전중에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 운전을 해 복잡한 도로환경 구도 속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나 각 기관 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도 발생이 되고

하다.

# 운전중 광고 현수막 보면 교통사고 위험 높아져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자

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쳐다보며 운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각

자제하길 당부한다.

+

#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광고문의 650-2099 650-2060 마케팅본부 정치부 650-2030 사 진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사 업 본 부 650-2009 650-2007 국 650-2020 업 무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있는 실정이다.

을 가져야 한다.